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방안

2015. 9. 22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1 2015-09-08 오후 1:14:28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2 2015-09-08 오후 1:14:28

목 차

1 벤처의 성과와 중요성 5

1. 태동배경 ····· 5
2. 현황과 성과 ····· 6
3. 현안사항 ····· 8

2 비전 2017 9

1. 비전과 목표 ····· 9
2. 정책과제 ····· 10
3. 자기혁신 ····· 11

3 5大전략 · 13大아젠다원의 적극 육성 12

1.【벤처창업】부문 ····· 12
- ●기업가정신 교육의 혁신
- ●성공창업과 초기정착 지원
- ●혁신주도형 소셜벤처기업 육성

2.【IT융합촉진】부문 ····· 18
- ●IT융합 역량강화
- ●창의형 IT인재 육성과 공급

3.【인프라개선】부문 ····· 22
- ●R&D와 기술역량 강화
- ●기술중심의 벤처확인제도 개편
- ●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4.【금융조달】부문 ····· 28
- ●기술금융 환경과 연대보증제 개선
- ●코스닥을 신성장동력 기업거래소로 독립
- ●중간회수와 M&A 활성화

5.【시장확대】부문 ····· 35
-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4 기대효과 39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4 2015-09-08 오후 1:14:30

1 태동배경

○ 벤처기업은 1997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으로 법정 기업인증 및 제도적 지원을 개시

- 벤특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벤처기업에 창업, 세제, 금융, 인력, 입지, 판로 등 파격적 지원의 근거

※ 관련 일반법 : 조특법, 지특법, 특허법, 병역법, 창업지원법 등

○ 당시는 IMF 외환위기(1996~2001)의 조기극복으로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일대 모멘텀이 필요했던 시기

- 벤처는 기업특성상 대거고용 유발, 기술경쟁 촉발, 자수성가형 성공신화 배출 등으로 사회전반의 위축된 분위기를 붐업하는 계기

- 1996년 설립된 코스닥시장도 추가자금이 필요했던 벤처기업에 직접금융을 지원함으로서 기술중심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견인

○ 이후 벤처는 2001년 벤처버블과 함께 반벤처정서, 지원정책 축소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 2005년부터는 축적된 역량으로 재도약에 성공하여 매출과 고용 면에서 탁월한 성과 도출, 이후 벤처특별법 연장 등 사회적 재조명을 유인

민간주도 벤처제도

한국의 벤처는 1995년 벤처기업협회를 설립한 1세대 벤처기업가들이 중심이 되어 벤처캐피탈, 스톡옵션, 벤처특별법, 코스닥을 탄생시킴으로서 성장기반 구축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5 2015-09-08 오후 1:14:33

2 현황과 성과

□ 현 황

○ 1998년 벤처확인업무 시행이래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현재 2만 7천 개사를 돌파

- 연도별 벤처확인기업수

1998	2002	2006	2009	현재
2,042	8,778	12,218	18,893	27,119

※ 1회이상 벤처확인기업수 : 52,961개사

- 업종별 현황

구 분	첨단제조	정보처리 S/W	R&D /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	기타	계
업체수	20,118	3,769	298	409	409	2,116	27,119
비율(%)	74.2	13.9	1.1	1.5	1.5	7.8	100

※ 여성대표 벤처기업수 : 2,006개사('12.6 현재)

○ 고급 기술인력의 고용을 견인

구분	업체수	평균고용	벤처총고용
현재벤처기업	27,119개사	27명	732,213명
1회이상 벤처확인기업	52,961재사		1,429,947명

○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성과가 일반 중소기업 대비 우수

구분	중소기업	벤처기업
매출액 증가율	13.1%	22.4%
영업이익율	4.9%	5.9%
순이익율	3.2%	4.0%

○ 연구개발비 투자확대로 기술발전 견인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매출대비 R&D 투자율	1.5%	0.8%	3.6%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6 2015-09-08 오후 1:14:36

□ 벤처의 성과

○ 벤처는 성장성, 고용창출, 연구개발투자 면에서 타 기업군에 월등히 우세하여 **성장과 고용을 주도**(기술중심 혁신기업의 대표사례)

구분	성 과
성장성	○ 벤처확인 누적기업 52,961개사의 총매출 : 382조원(GDP대비 30.9%) ※ 매년 20.3% 증가(고성장 기업군)
고 용	○ 벤처기업의 총고용 : 143만명 ※ 2011말 국가 전체취업자(24,125천명)의 5.9%
혁신성	○ 역대 차세대일류상품의 71%, WC300의 84%, 히든챔피언의 64% 점유 ※ 매출대비 R&D투자비 : 3.6%(대기업 1.5%, 중소기업 0.8%)

매출천억 벤처기업('11)

◇ 매출천억 벤처 381개사, 가젤형기업(3년연속 20%이상 매출신장) 49개사
◇ '05년 68개사에서 7년만에 5.6배 증, 총매출 78조원, 총고용 13만명
※ 총매출의 GDP 비중 : 6.29%

○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 벤처는 특유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대규모 자본이나 시설이 아닌,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IT, 녹색, 바이오, 나노 등 **차세대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

○ 벤처는 신경제 패러다임을 주도한 **코스닥을 견인**

- 기술벤처가 주도한 코스닥은 1996년 개설한 이후 시가총액 113조원, 상장사 1천개를 달성하여 GDP의 8.6%를 담당

※ 코스닥내 벤처출신기업(1회이상 확인)은 679개사(65.9%), 코스피는 6.7%

○ 벤처 성공신화는 청년층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창업붐으로 승화**

- 벤처는 IMF 이후 안정화 경향의 국민정서를 꿈과 Can-do 정신으로 계승시키는 단초 제공(우리민족의 기질과 부합)

※ 청년창업 벤처 : 비트컴퓨터(조현정), 휴맥스(변대규), 컴투스(박지영), 인크루트(이광석), 이스트소프트(김장중), 아이디스(김영달) 외 다수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7 2015-09-08 오후 1:14:40

3 현안사항

벤처 지속성장의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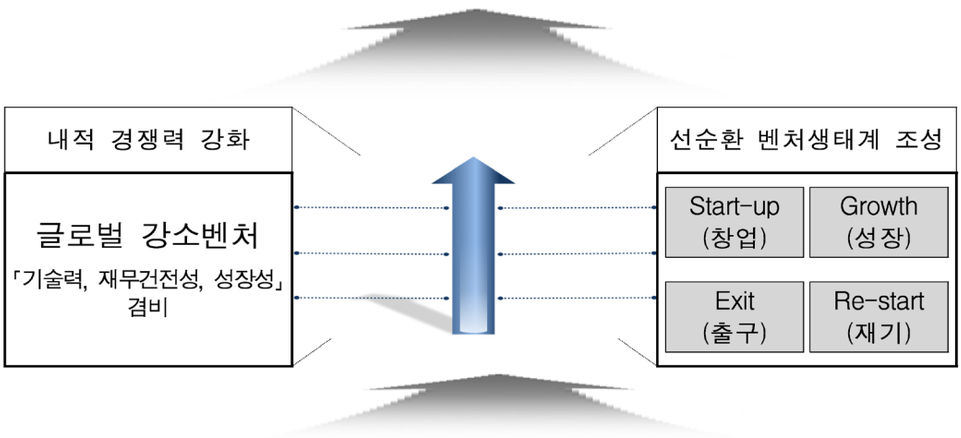
창업 측면	**창업환경의 개선** ①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 시스템 미흡 ② 청년창업의 사회적 여건 미성숙 ③ 사회적(소셜)벤처 육성의 제도적 인프라 부재
융합 측면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① IT융합의 가시적 성과 저조로 확산이 지연 ② 창의형 IT기술인재 부족
인프라 측면	**지속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 ① 중소벤처 R&D 지원책 및 기업역량 미흡 ② 벤처본질의 기술성 위주 확인시스템 미흡 ③ 불공정거래로 수익성 악화 및 기업의욕 쇠퇴
금융 측면	**자금조달 환경개선** ① 기술가치를 우대하는 금융시스템 미성숙 ② 코스닥 시장의 매력도 저하 및 회수기능 약화 ③ 투자회수시장과 출구시스템 미성숙 ④ 경영재기를 위한 인식공유와 법제도 미흡
시장 측면	**마케팅 지원 강화** ① 공공구매 저조로 내수시장 초기진입의 애로 ② 해외시장 진출 역량 부족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8 2015-09-08 오후 1:14:43

Ⅱ 비전 2017

1 비전과 목표

비 전	**창업확산과 생태계 고도화로 성장과 고용 견인**
목 표 (~2017)	벤처창업 3만개사, 신규고용 100만명, 천억벤처 1천개사 달성



목표달성을 위한 벤처생태계 전략

창업환경	융합촉진	인프라개선	금융조달	시장개척
①기업가정신 교육 ②창업/생존율 제고 ③소셜벤처 육성	①IT융합 역량강화 ②창의인재 육성	①R&D역량 강화 ②벤처체질 제고 ③상생문화 정착	①기술금융 지원 ②성장정체 개선 ③투자회수 환경	①공공구매 확대 ②글로벌화 촉진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9 2015-09-08 오후 1:14:46

2 정책과제

벤처창업	기업가정신 교육의 혁신	○ 범국가적 기업가정신 교육시스템 구축 ○ 교육대상자별 교육기본안(컨텐츠) 개발
	성공창업과 초기정착 지원	○ 기술정보회사를 통한 창업성공율 제고 ○ 성공창업 멘토링 플랫폼 구축
	혁신주도형 소셜벤처기업 육성	○ '사회적 벤처(Social Venture)' 확인제도 도입 ○ 소셜벤처기금 조성으로 확인기업 성장지원
융합촉진	IT융합 역량강화	○ 기술공급자 중심 IT융합 시범사업 확대 ○ 기업부설 'IT융합기술연구소' 설립지원
	창의형 IT인재 육성·공급	○ IT융합특성화대학원 지정, 융합인재 양성 ○ 민관공동 '벤처기업연수원' 설립·운영
인프라개선	R&D와 기술역량 강화	○ R&D과제 성격별 연구수행주체 체계화 ○ R&D전문기업 육성으로 기술역량 강화
	기술중심의 벤처확인제도 개편	○ '기술집약 스타트업 벤처' 유형 신설 ○ 유형별 벤처확인의 다변화 및 전문화
	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 최저가낙찰제를 상생가격낙찰제로 전환 ○ 인력임치제로 벤처기업 기술인력 보호
금융조달	기술금융환경과 연대보증제 개선	○ 엔젤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 민간금융권 포함 연대보증제 추가적 완화
	코스닥 개편으로 벤처활력 제고	○ 거래소를 지주(주식)회사 체제로 전환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 독립운영)
	중간회수와 M&A 활성화	○ '혁신거래소' 설치로 기술거래와 M&A 촉진 ○ 대중소기업간 개방형 혁신거래 활성화
시장확대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 이행력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상벌 강화 ○ 중기제품구매촉진법 개정으로 강제규정화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 '중소벤처전문 글로벌상사' 설립 ○ '글로벌혁신 벤처기업' 선정 및 지원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10 2015-09-08 오후 1:14:49

3 자기혁신

□ **윤리경영 실천**으로 벤처위상 제고

- ㅇ 53,000여 凡벤처기업 대상 '윤리경영실천 공동협약' 체결(2013)
- ㅇ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2013)

□ **R&D** 투자확대로 세계적 **창의제품 개발**

- ㅇ 매출대비 R&D 투자비율을 3.6%에서 4%까지 확대(~2015)
- ㅇ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문화를 창출하는 제품 개발(MP3, 닌텐도, 아이폰)

□ 중견-신생벤처간의 **상생모범 실천**

- ㅇ 매출천억벤처클럽(381개사)과 스타트업벤처포럼간의 상생협약 체결(2013)
- ㅇ 불공정거래 예방과 상생실천의 모범사례로서 대기업군에 전파

□ 자발적 외감으로 **투명경영 앞장**

- ㅇ 벤처기업 '자발적 외감참여 캠페인' 전개(2014)
- ㅇ 외감법에 의한 대상기업(자산 100억) 이하기업도 경비지원으로 외감 실천

□ 취약층 고용 등 **CSR 적극 도입**

- ㅇ 벤처기업의 사회적책임 확산을 위해 CSR 도입 60% 달성(~2015)
- ㅇ 중소기업의 CSR도입율(38%, 2011 기준)

□ 멘토링, 엔젤투자로 **후배벤처 육성**

- ㅇ 성공벤처인의 창업자 멘토링, 대학생 기업가정신 특강, 엔젤투자 등을 확대
- ㅇ 현재 '벤처7일장터, YES기업가정신특강, 엔젤투자클럽' 다수 참여

□ 종업원 자질향상를 위한 **교육과 복지투자 확대**

- ㅇ 교육훈련으로 종업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의 모범사례화로 국민인식 변화

□ 미래 **신성장산업 견인**

- ㅇ 나노・녹색・바이오・대체에너지 등 신성장산업의 발굴과 성장 견인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11 2015-09-08 오후 1:14:53

Ⅲ 5大 전략 · 13大 아젠다

1 벤처창업

1) 기업가정신 교육의 혁신

□ 현황과 이슈

○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창업 촉발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실업문제의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주요 근간

- 현행, 각계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관된 기업가정신 교육체계(coherent structure)는 부족한 상황

※ 기업가정신의 4대요소 : ①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②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한 장애(규제)제거와 조정, ③기업가정신에 충만한 인적자산의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④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한 위험 보상체계

○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은 기본이고, 무엇보다도 문화적·정서적·환경적 토양이 매우 중요

※ 즉, '기술창업'이라는 콘텐츠와 '기업가정신'이라는 그릇이 결합되어야 성공하지만, 한국은 IMF 경제위기 이후 국민의 안정화 추구 경향이 대세

현행 기업가정신 교육의 진단

◇ 初中高大 등 대상별 교육에 치중하여 교육시스템간의 연계성 부족
◇ 체계적 설계보다는 상황적인 정책방향에 영향받고 커뮤니티와 네트워 형성에 한계
◇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이 부족
◇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미흡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12 2015-09-08 오후 1:14:56

□ 정책제언

○ ‘국가수준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시스템’ 구축

- 현행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 교육방법 등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정규교육 커리큐럼화로 교과목 편입)

- 특히 대학의 교과목 운영체계, 인센티브, 학생선발, 교수연수 추진

○ ‘기업가정신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성 및 **교육표준기준** 수립

- 기업가정신의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협력관계 네트워크망 확충과 결합 및 지원강도 제고

※ 이해관계자 : 정부, 서비스제공자, 자본 제공자, 언론, 비즈니스 관련 협회, 지역 공동체 중심조직, 기업가, 교육시스템, 대학교육시스템 등

- 통합적 기업가정신 교육시스템으로서 기업가정신 교육의 목적을 정의하고, 대상별 교육내용・컨텐츠・교육과정 등을 마련

※ 마련된 교육시스템은 창업선도대학,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에 우선 적용하고, 개발된 교과과정은 각계 기업가정신 교육자들에게 공유

○ 기업가정신 **교육대상자별 교육기본안(컨텐츠)** 마련

- 교육대상자는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특성에 따른 교육진행

구분	대상자
1단계	초등학생 및 교육・훈련경험이 전혀 없는 성인
2단계	중학생
3단계	고등학생 및 직업교육 대상자
4단계	대학생
5단계	대학원 이상 및 기업가・기업의 관리자

※ 콘텐츠 구성 : (1)지식(knowledge) (2)능력(skills) (3)역량(competence)

○ ‘기업가정신 교육자’ 양성기관 지정・운영

- 양성기관에서는 교육 컨텐츠 개발 및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을 전담운영하고 프로그램 성공사례는 널리 공유(공유시스템 구축)

※ (예) 미국 Babson College의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 - Symposium for Entrepreneurship Educator, 스탠포드 대학의 공유시스템 - ECORNER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13 2015-09-08 오후 1:15:00

2) 성공창업과 초기시장 정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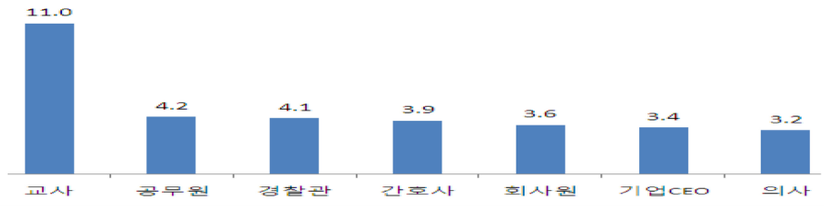
□ 현황과 이슈

○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창업이 필수적이지만 벤처버블 붕괴 이후 도전정신이 쇠퇴하고 있어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국가경쟁력에까지 악영향

※ 청년창업 벤처CEO비중 : ('02)56%, ('04)47%, ('06)15%, ('09)12% ('11)10%
※ 2012 세계은행 발표 한국의 창업환경 순위 : 24위(2011년도 22위)

고교생의 창업마인드 지표

고교생들은 교사(11.0%), 공무원(4.2%) 등의 직업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기업 경영자는 3.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



※ 자료: 전국 고교생 2,165명 대상, 진료교육 현황조사('11, 직업능력개발원)

- 일생동안 창업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20대 대학생의 25%가 '없다' 라고 응답

※ 대학생 · 직장인 · 기업인 대상 조사, 681명, 2010.9, KOVA

○ 특히 고급일자리를 견인하는 기회창출형 기술창업은 최근 전반적인 창업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저조

※ '10년 기준 업력 3.5년 미만 기업가 가운데 생계형기업가 비중은 39%(OECD 평균 21%), 혁신을 주도하는 기회형기업가 비중은 49%(OECD 평균 53%) <2011, 산업연구원(KIET)>

○ 청년일자리창출 경쟁력 종합지수도 2.37점(5점만점)으로 OECD 20개 주요국중 16위→잠재적 일자리 위험국(2012. 동아일보+모니터그룹)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14 2015-09-08 오후 1:15:04

□ 정책제언

○ **창업의욕 고취를 위한 붐업사업** 추진

- 초중고 교과서에 기업가정신 내용 확대 및 우수 기업가정신 교원 양성

※ 민족사관고 출신, 의사·법조인보다 기업체·연구소 진출 두드러져('1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학생교육)

○ 창업실패자를 위한 **회귀프로그램** 마련

- 창업리스크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 유경험자는 공공기관 취업시 가점 부여, 창업실패자의 재창업시 정부지원사업 우선참여

○ 출연(연) 보유 **기술아이템 공유**

- 기술창업공모제를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아이템 제공 및 상용화 밀착지원

○ 성공창업 **멘토링 확산**

- 창업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유치, 기술거래, 경영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멘토링 플랫폼 구축

※ 창업커뮤니티 '고벤처포럼', 벤처기업협회 멘토링 서비스 '벤처7일장터' 등 오프라인 중심의 창업 멘토링 사업이 시행중이나 전국규모로 활성화 필요

○ **'기술정보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성공 가능성 제고

- 창업 또는 사업실패로부터 재도전 및 재기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사후적조치로서 바람직하나 기술창업의 성공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 기술정보 인프라차원에서 독립된 기술정보회사를 설립하여 기술수명정보,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분석·제공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15 2015-09-08 오후 1:15:06

3) 혁신주도형 소셜벤처 육성

□ 현황과 이슈

○ 현행 사회적기업 정책은 고용정책과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 의존성이 높고 자원조달의 시장원리 부재

- 따라서 혁신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사회적기업이 배출 되지 못하는 등 한계에 봉착

※ 정부지원 종료 **34**개 사회적기업의 고용변화 : **62%** 감소

○ 또한 사회적기업은 자체 경쟁역량 부족, 인적자원(우수인력) 부족, 경제 및 사회 생태계와의 연계부족 등에 의해서 개별기업 지원정책보다는 생태계 구축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

<사회적기업 제도의 문제점>

진단요소	결 과
생태계 (Habitat)	정부주도의 생태계, 고용정책과 사회서비스 중심의 정책 및 제도적 지원 위주, 기존 경제 생태계와의 단절, 산업정책 논리(벤처정책, 중소기업정책)의 보완 필요성 대두
기업가 (Entrepreneur)	기존의 사회사업 분야 종사자 중심,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창업자 풀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혁신적인 기업가의 출현이 제한적
자원 (Resource)	정부주도의 자원 제공, 인건비 지원 중심, 기타 교육·컨설팅 위주의 지원 제도, 자원조달의 시장원리 부재
기회 (Opportunity)	취약계층 고용에만 중점, 혁신주도형 소셜벤처 부족, 수요견인 정책의 부재, 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부재

○ 따라서 기존의 벤처기업 제도와 사회적기업 제도를 혼합한 사회적 벤처(소셜벤처)의 도입으로 제3세대 기업가정신 확산의 계기 필요

- 최근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미래전망이 불투명하여 위험회피적 경향이 지배적인 반면, 사회복지·사회적가치 등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적 벤처(Social Venture)제도의 도입과 지원이 시급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16 2015-09-08 오후 1:15:10

□ 정책제언

○ 사회적벤처(Social Venture) 확인제도 신설

- 소셜벤처는 사회적기능(고용・복지)과 산업혁신기능을 동시에 보유하므로 벤처확인의 유형에 포함하여 전략적으로 육성

- 벤특법 개정으로 소셜벤처 확인기준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소셜벤처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동종업종 및 이업종간 협력중개

○ 혁신적 사회적기업가 양성

- 혁신적 사회적기업가 육성과정을 설치하여 1인기업, 대학출신기업가, 공공부문 출신기업가, 사내기업 등 다양한 기업가원천을 발굴하며, 실패기업가의 소셜벤처 재창업 유도

○ '소셜벤처기금' 조성 및 운용

- 소셜벤처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가 큰 소셜벤처에 채권을 발행하여 공익기금 또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정부와 대기업의 출자 병행)

- 사회혁신채권과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및 운영(기업분석 및 평가, 사회적 가치 측정, 펀드운용, 창업보육, 경영지원 등 수행)

○ 소셜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시장개발

- 소셜벤처는 공공시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공공부문에서의 조달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서비스 등을 위탁

  ※ 경제, 사회, 환경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책임 구매제도의 도입을 검토

- 민간시장에서의 윤리적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서비스 위탁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입 필요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17 2015-09-08 오후 1:15:12

2 IT융합촉진

1) IT융합 역량강화

□ 현황과 이슈

○ IT융합은 생활품격 향상을 통한 개인니즈 충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적 기능 그리고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 지속발전을 보장

※ '브라이언 아서' 교수(스탠포드대) 'IT기술은 경제발전을 가속시키나 경제의 본질변화를 가져오진 않음. 하지만 IT기술을 활용한 경제의 디지털화는 많은 변화를 도출(기술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강연中(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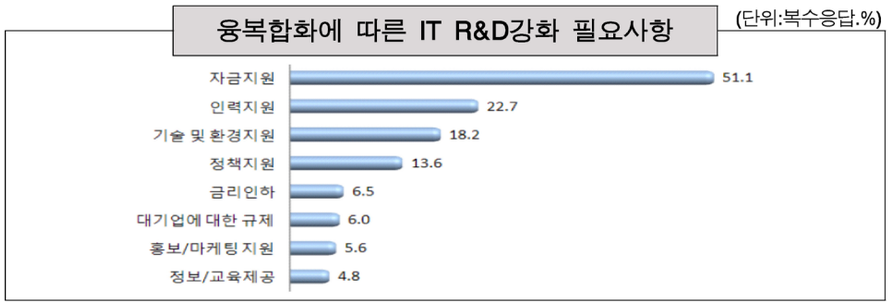
○ 기술·산업간 융합 촉매제로서 IT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IT융합이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IT융합시장의 고성장 전망

※ 세계IT융합시장 : ('10) 1.2조달러 → ('20) 3.6조달러, 연평균 11.8% 성장

※ 한국IT융합시장 : ('10) 390억달러 → ('20) 1,483조달러, 연평균 14.0% 성장

- IT융합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연관산업의 대규모 잠재수요를 촉발하며 새로운 형태의 신산업 창출

○ 하지만 IT융합분야 중소벤처기업은 융합관련 자금, 인력, 기술개발(R&D), 상용화, 파트너십 등에 있어 많은 애로 호소



(2012 IT중소기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 또한 2011.11,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대기업과 중소벤처간의 미스매칭, 융합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법제도적 제약요인 상존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18 2015-09-08 오후 1:15:15

□ 정책제언

○ 공급자중심 IT융합 시범사업 확대

- 중소벤처기업의 IT융합분야 기술확산을 위해 IT기술공급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IT융합 시범사업 확대시행(스마트의료, 재난안전 등)

※ 기존 주력산업이 주도한 개발에서는 IT기술의 전면적 응용이 부진하고, 개발주체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에 한계

(주) 융합활성화를 위한 기업의견중 1순위는 "자금 및 세제지원", 2011 NIPA

○ 민간분야의 'IT융합 기술연구소' 설립지원

- 민간차원의 IT융합 R&D 확산을 위하여 현행 기업부설연구소와는 별도로 기업이 'IT융합 기술연구소'를 설치토록 하여 집중지원

※ 별도의 인가요건을 갖추어 승인받은 기업은 세제, 정부과제 가점, 전문연구요원 편입지정 등의 혜택부여

○ IT융합기술 수요자와의 Open Innovation 및 네트워킹 강화

- IT 수요산업(자동차·조선·건설 등)과 공급자간의 Open Innovation을 강화하고, 상호 참여와 공유를 확산하는 네트워킹 강화

※ (가칭) 주력산업이 주도하는 'IT융합 Open Innovation 포럼'을 설치,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분야와 공동협력 강화

○ 융합제품의 시장확대를 위한 '디자인 기술융합' 확산

- 기술융합을 통해 제시되는 기술적 가능성을 소비자의 가치창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융합프로젝트 진행시 디자인 접목 강화

※ 융합기술과 디자인의 사례 : 보르도TV, 아이폰, K5 등

○ 산업-IT융합 코디네이터 양성

- IT융합 활성화가 부진한 원인은 각 주력산업과 IT와의 융합을 기획하고 중재하는 전문지식인의 부족에 기인

- '산업-IT융합전문가과정'을 설치하여, 기술전문가중 주력산업 이해도와 IT응용기술 자질을 갖춘자를 교육하여 공급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19 2015-09-08 오후 1:15:17

2) 창의형 IT인재 육성과 공급

□ 현황과 이슈

○ 급변하는 글로벌 IT트렌드에 적응하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S/W, 플랫폼, 서비스 등에 전문적이고 창의역량이 있는 인재 필요

- 향후에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T신수종 및 플랫폼을 선도하는 인재가 트렌드를 견인

※ 미국은 빅데이터 이니셔티브 계획을 발표('12.3)하고, 인력을 중점육성

○ 한국은 그간 IT강국으로서 IT학과 정원확대, 실무지향 육성, 산학중심 육성 등에 치중하였으나 앞으로는 창의형 IT인재 양성이 관건

- '11년 현재 IT중소기업(16,188개사)의 인력은 45만명에 근접하나 이중 R&D인력은 24.1%로서 타 직종에 비해 부족율이 최고 심각

※ R&D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 :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인력(중간관리) 부족

○ 한편 산업전체 기술인력의 부족인원은 28,181명으로 전년 대비 5,292명 감소, 부족률도 전년 대비 0.9%p 감소한 4.3%

- 전체 부족인원은 감소했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

※ 300인 미만기업의 부족인원 : ('08)16,425 → ('09)29,333 → ('10)25,373명

※ 300인 이상기업의 부족인원 : ('08)4,527 → ('09)4,140 → ('10)2,808명

<연도별 · 규모별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 및 부족률>

(단위 : 명, %)

규 모 별		2007		2008		2009		2010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중소 사업체	10인~29인	11,812	10.4	8,439	7.0	12,058	10.6	10,473	9.9
	30인~99인	10,183	6.5	5,703	4.1	11,791	7.6	9,614	6.0
	100인~299인	5,436	4.9	2,283	1.9	5,484	4.4	5,286	4.3
	소계	27,431	7.2	16,425	4.3	29,333	7.5	25,373	6.5
대규모 사업체	300인~499인	2,201	5.1	638	1.6	1,113	2.6	936	2.2
	500인 이상	5,685	3.0	3,889	2.1	3,026	1.5	1,872	0.8
	소계	7,886	3.4	4,527	2.0	4,140	1.6	2,808	1.1
계		35,317	5.7	20,952	3.5	33,473	5.2	28,181	4.3

※ 자료 :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 지경부, 2011.12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20 2015-09-08 오후 1:15:19

□ 정책제언

○ IT-비IT간 네트워킹형 인재육성

- IT융합과 신기술 확산을 위해 IT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IT융합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지원

※ '13~'15까지 매년 5대학을 선정, 대학별 3개년간 30억원 지원

○ 산업체 IT인재 교육훈련 지원

- 기업의 직원교육프로그램, 대표이사 의식, 장기재직율 등을 심사하여 '親인재 혁신기업'을 선정, 정책적으로 지원

- 선정기업은 공공부문의 IT교육과정 우선참여, 자체 교육훈련비 보조, 신규인력 채용 지원 등으로 인력의 수급과 자질향상 지원

○ 인력분쟁 조정과 **민관공동 '벤처기업연수원' 설립**

- 핵심인재의 부당한 스카우트를 방지하는 '인력채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력유출 분쟁발생시 위원회가 상호 조정기능 수행

- S/W인력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관공동 '벤처기업연수원'를 설립하여 우수인력의 공급 확대

※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대학이 배출한 S/W인력의 질적수준은 기업 요구의 50%

벤처기업연수원의 기능

- ○ 일반인 대상 벤처기업 홍보교육
- ○ S/W, IT융합 등 신성장동력분야 기술인력 양성(재교육)
- ○ 벤처기업 임직원 자질함양 교육
- ○ 벤처창업교실, 시니어 재창업교실 운영
- ○ 초중고생 벤처기업 캠프 운영
- ○ 산학협력 공동연구과정 운영 등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21 2015-09-08 오후 1:15:24

3 인프라 개선

1) R&D와 기술역량 강화

□ 현황과 이슈

○ 16조원(2012)에 달하는 국가 R&D자금의 편성·관리에 있어 한정된 예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벤처 측면에서 재평가가 필요

- 즉, 정부자금 지원의 취지는 민간투자의 부족분을 정책적으로 보조하여 기술력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연구주체별로 편중되어 운영중

- 특히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국가 R&D시스템은 우리경제의 산업화 진행단계에 맞추어 선진형으로 개편할 필요성 대두

<총예산중 대기업·대학 지원비중이 34.3%이나 중소기업은 12%('10)>

수행주체	국공립(연)	출연(연)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100%	5.2	39.8	25.3	9.0	12.0	8.7

※ 성과면에서 출연연·대학의 기술이전율은 25.2%, 연구생산성은 5.3%에 그침

- 수행주체별로 기초연구과제, 중장기연구과제, 단기산업화과제 등의 역할분담이 미정립

※ 출연연·대학의 연간연구과제중 기초·응용연구 외 '개발연구' 수행비율이 각각 39.7%, 20.8% 육박(상용화가 목표인 '개발' 연구를 과도수행)

○ 벤처는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창출하므로 우수인재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R&D 인력의 신규유입은 물론 유지도 곤란

- 더욱이 최근 대기업에서 S/W 및 첨단업종 기술인력을 공격적으로 채용하고 있어 벤처 입장에서는 사업영위가 흔들리는 상황

- 또한 S/W인력은 기업이 원하는 숙련도와 실무경험을 갖춘 인재가 없으며, 필수 기술분야의 교육을 받은 R&D인력도 턱없이 부족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22 2015-09-08 오후 1:15:27

□ 정책제언

○ 정부 R&D자금중 **중소기업 지원규모 증액**

- 2012년도 국가총 R&D예산 16조원중 중소기업 지원은 약 13%
- 향후 연차적으로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늘려 2015년도 20% 수준까지 확대

○ 국가 R&D예산 편성시 **과제성격(기초·중장기·단기)별 연구수행 주체 재검토**

- 대학은 기초연구과제, 대기업은 중장기 미래과제, 출연(연)은 응용과제, 중소벤처기업은 단기 상용화 개발연구과제를 중점지원

○ **R&D전문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제고

- 중소벤처의 부족한 R&D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R&D관련 정보, 기술컨설팅 능력, 시험·분석, 개발인력 등이 풍부한 R&D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기업의 개발수요에 대응

※ 2012 현재 R&D 전문기업은 140여개로서 총매출이 고작 8,756억원 수준

○ R&D 결과 **지재권 유동화 촉진**

- 기업보유 IP의 가치평가로 비핵심IP는 매각하고, 핵심IP도 전문기관이 주관하여 IP Pool을 구축하여 해외 NPE의 제소에 공동대응

○ 중소벤처기업 **지재권 관리 지원**

- 중장기 정부 R&D과제에 참여하는 중소벤처는 초기 2~3년간 "특허전문가 활용비"를 과제의 직접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개선
- 정부과제 전담기관에서는 업종별 특허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희망하는 기업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23 2015-09-08 오후 1:15:29

2) 기술중심의 벤처확인제도 개편

□ 현황과 이슈

○ 벤처는 '98년도 확인업무 시행이래 양적으로는 27,114('12.9)개사, 매출천억기업도 381개사에 달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 도출

○ 하지만, 양적 확대에 걸맞는 질적 제고와 확인업무의 재점검을 통해 창업의욕을 고취하고, 벤처의 특성·취지를 살려야 할 필요

- 벤처확인제 근본취지에 따라 기술집약형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고, 보증기관 중심의 제도실행에 대하여도 재고찰 필요

<확인유형별 벤처기업 비율> (2012. 기술보증기금)

구분	벤처투자형	기술보증형	기술대출형	연구개발형	예비벤처	계
비 율	2.27	88.07	4.04	5.39	0.23	100%

- (기술평가유형) 벤처기업의 기술가치, 미래가능성 및 잠재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재무성과 등 안정성 척도 위주로 치우치는 경향

- (벤처투자유형)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패턴이 우량기업에 대형화됨에 따라 창업기업·초기기업의 확인률 저조

※ 벤처투자형 확인기업비율 : ('08) 3.8%, ('10) 2.9%, (현재) 2.3%

○ 따라서 벤처투자기관의 범위는 엔젤등으로 확대, 연구개발비 비율을 매출액별 현실화, 보증기관의 기술심사방식 재검토 등 필요

※ 매출대비 연구개발비율이 업종별 6~10%로서 매우 높으며, 고매출기업은 비율매칭이 현실적으로 불가(2010 벤처의 평균 R&D비율은 3.6%)

○ 대학교수 창업을 의한 겸직의 용도로만 활용되는 예비벤처제도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개편할 필요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24 2015-09-08 오후 1:15:30

□ 정책제언

○ 기술력 중심의 평가방식 개선

- 현행 기술평가등급에 벤처기업의 핵심속성인 기술집약도를 과락기준으로 활용하는 '기술평가등급 통과제+기술집약도 과락제' 도입

※ 기술집약도로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를 과락기준으로 도입할 경우, 기술평가형 확인기업의 약 50%내외가 탈락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

○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의 운영방식 개편

- 현행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민간부문(사업자단체)의 역할 강화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벤처확인공시시스템(venture.or.kr)의 운영주체 및 관리방식 개선 검토

○ 가칭 '기술집약 신생기업(Start-up) 유형' 신설

- 창업초기기업 발굴확대를 위해 업종별 심사위원회를 구성,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새로운 유형으로서 '기술집약 신생기업' 유형을 신설

※ 업종별 심사위원회는 전문단체 주관으로 학계, VC, 회계사 등으로 구성해 운영

○ 엔젤투자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유형 확인제도 보완

- 초기벤처의 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벤특법상 투자기관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엔젤투자자도 포함(엔젤투자확인은 전문단체가 담당)

○ R&D 투자비율 현실적 조정

- 연구개발유형 확인시 업종별 R&D 투자비율을 하향조정 또는 '업종별 비율제'를 '매출별 비율제'로 변경(확인기관에 전문단체 추가 검토)

○ 예비벤처 확인방식 개선

- 예비벤처 확인기준 개선과 함께 예비벤처(1인창조기업 포함)에게도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안 필요

※ 예비벤처 3년자격 유지 시 가칭 '기술집약 신생기업' 유형으로 자동승급 검토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25 2015-09-08 오후 1:15:32

3) 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 현황과 이슈

○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중소벤처의 경영활동을 약화시키고, 창업동기 및 기업가정신을 위축시켜 결국 국가경제발전을 저해

- 원·하청간 불평등한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기술탈취, 단가인하 압력, 기술인력 빼가기, 거래상의 지위남용 등이 성행

※ 벤처기업도 90.2%가 대기업과의 거래시 불공정의 심각성이 '보통이상'으로 응답('11.12. 벤처기업협회)

○ 이런 결과로 '09년 금융위기 회복과정에서 대기업의 수익성이 중소기업에 비해 크게 개선되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

※ 대기업에 납품하는 벤처기업의 희망이익율은 24.2%이나 현재 이익률은 13.1%에 그침('11.12,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 '11년도 대기업의 매출액세전순이익율은 4.6%, 중소기업은 2.2%로서 절반이하 (한국은행)

○ 또한 우수기술 창업자들은 대기업과의 협력과정에서 기술을 빼앗기거나 사업화 한계로 스스로 사장시키는 사례도 빈번

- 대·중소기업간 특허분쟁으로 진행될 시 중소벤처기업은 전문가 부재 등으로 패소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

< 중소기업 : 대기업간 특허분쟁 패소율 >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09	2010
중기 패소율	48.5	49.1	54.3	64.5	64.5	66.7

- 기술 및 인력탈취에 대한 입증책임, 전속고발권 등에 대한 재검토와 불공정 신고자에 대한 보복금지 등의 법제화 필요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26 2015-09-08 오후 1:15:37

□ 정책제언

○ 기술임치제와 상호 연동하는 **'핵심기술인력 임치제' 도입**

- 공공단체에 등록한 핵심인력(본인동의, 2년단위 갱신)은 타기업이 스카우트시 현직장 대표자에 사전통보 및 적정 교육훈련비를 지불(대중소상생법 제24조 개정) ※ 등록인력의 부담완화를 위한 수당지급 검토
- 등록된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한 기업은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갈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3배) 부과

○ 최저가격낙찰제를 **'상생가격낙찰제'로 전환**

- 선 성능평가 후 입찰제 도입으로 품질평가와 가격평가 분리하고, 대기업에 대한 납품방식을 시장경쟁형 납품방식(최저가낙찰제 적용)과 공동개발형 납품방식(개발비용 보전)으로 유형화
- 연간단가계약제를 의무화 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예가공개제를 도입

○ 불공정행위 신고기업에 대한 **보복행위금지 제도화**

- 민사적 피해구제를 위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신고사실,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배제된 사실을 입증하면 보복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
-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고 보복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대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중소기업의 86.8%가 비보복 정책 지지, 중기옴부즈만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각사유 공개**

- 피해자의 신고를 조사요구권으로 규정하여 거부처분·기각결정에 행정청의 처분성을 부여하며, 이와 같은 처분을 할 경우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유서를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행정심판·소송 등 불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 확대**

- 불공정행위는 기업의 이윤창출을 하락시켜 성장을 방해하고, 우월적 지위를 항존하도록 함으로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므로 현행의 적용범위 확대하여 모든 부당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배 적용(하도급법 제35조)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27 2015-09-08 오후 1:15:38

4 금융조달

1) 기술금융 환경과 연대보증제 개선

□ 현황과 이슈

○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주기에 걸쳐 제1의 애로는 자금의 원활한 수급에 있으나 현행 보증 및 금융시스템으로는 충족이 불가

- 근본원인은 금융권의 안정화 경향으로 기술이나 성장잠재력보다 물적가치에 치중하여 보증과 대출을 운용하기 때문

※ '09년 대비 '12.8말, 기업은행의 대출추이 : (대기업) 136%↑, (중기) 17%↑

- 엔젤, 창투자 등의 투자유인을 위한 제도나 인센티브도 미흡하여, 엔젤투자는 2000년~2011년 사이 95% 감소

※ 엔젤투자 추이(억원) : ('00)5,493, ('06)971, ('08)492, ('10)326, ('11)296

※ '10년 엔젤투자는 326억원, VC투자(1조910억원)의 3%에 불과, 반면 미국은 50%에 육박('09년 176억불)

- 보증기관은 자격미달 기술평가자에 위한 기술심사, 재무실적 과다의존, 과도한 보증제한규정, 담당자 면책조항 부재 등이 문제

※ 신보의 신용등급 우량기업 보증추이 : ('10.2Q) 42.9% → ('12.2Q) 50.0%

※ 보증제한·금지항목 : 3년연속적자, 2년연속매출하락, 대표자 신용등급, 가압류 등 권리침해사실, 연체 등 약 15개 항목

○ 연대보증도 청년층의 창업의욕을 좌절시키고 우수 전문경영인의 영입을 저해하며, 창업을 촉진할수록 신불자를 양산하는 등식이 성립

※ 신·기보 평균 연대보증인수(명) : ('06) 1.61 → ('08) 1.47 → ('10) 1.24

- 미국 성공벤처의 평균창업율이 2.8회인 점과 같이, 우리도 실패자의 경험을 사회적자산으로 포용하고 창업의욕을 고무하기 위한 대책필요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28 2015-09-08 오후 1:15:42

□ 정책제언

○ **창업 열기를 저해하는 연대보증제도 추가완화**

- 가산금리제의 활성화 또는 **'기술가치보험제'를 도입**,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여 대출 또는 정책금융(보증, 정책융자)을 담보·연대보증 없이 신용으로 공급(향후 3년간 매년 1,000억원씩 보험기금 출연)

- 회생파산법 제250조의 2항을 삭제하여 회생추진기업의 채무조정시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감면되도록 부종성 인정(최소 법인청산전까지)

※ 2012.2.14, 금융위가 연대보증완화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실제경영자는 보증을 계속하며, 신기보 및 중진공이 채권자일 경우만 부종성을 적용

○ **'기술창업심사위원회'의 설치**

- 창업기술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를 정부조직으로 설치,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증, 자금, 판로 등을 적극 지원

※ 이스라엘은 총리실 산하 수석과학실(1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에서 기술창업 및 보육사업을 주관

○ **엔젤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 지원**

- 초기기업의 주요 투자 재원인 엔젤투자를 위축시키는 제도를 개선하여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투자유치 환경 조성

※ 소득공제제도 일몰 연장('15년말), 공제비율 확대(20→50%), 투자대상 확대(벤처→일반기업), 기업명의 엔젤펀드 출자 시 법인세 감면혜택 제공 등(법령개정중)

○ 창업자 발굴과 자금지원을 위한 **민·관공동 창업펀드 확대조성**

- 기술창업심사기관이 추천하거나 VC 및 BI가 발굴·검정한 창업자에 대해 민간자본투자액 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의 매칭펀드 조성

※ 한국시장에 관심있는 해외펀드를 유치하여 공동운용하고 투자후 경영멘토링 강화

○ **경영재기 기업인**을 위한 **자금 및 납세지원**

- 경영재기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선량한 실패기업인이 경영재기시 기업가치평가를 개선, 재창업지원금을 대폭증액(15억원 이상)

- 기존채무도 분할납부 기간과 체납세금의 징수유예기간도 연장

※ (세금마일리지제 검토) 실패전 기업경영시 납부한 총세금의 본인지분에 대한 마일리지로 체납액을 감면(마일리지 적용대상자 엄격심사·선정)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29 2015-09-08 오후 1:15:43

2) 코스닥을 신성장동력 기업거래소로 독립

□ 현황과 이슈

○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을 본부제로 운영(2005년 1월부터)

- 거래소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경 없는 경쟁이 격화됨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세 개의 시장을 통합하여 규모를 키우는 한편 다가올 환경에 적의 대응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제로 설립(합병이전은 회원제)

- 합병 전 후 시장 모습을 보면, 코스피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은 성장한 반면, 코스닥시장은 정체현상을 보였으며, 한국거래소의 국제화는 후진국(캄보디아, 라오스)에 시장개설을 했을 뿐 선진자본시장의 진출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음

<연도별 3개시장의 규모비교> (단위 : 기업수, 시총)

구 분	2000년	2004년	2005년	2011년	2012.9
유가증권	704개 188조원	683개 412.6조원	702개 655.1조원	791개 1042.0조원	786개 1098.1조원
코스닥	604개 29조원	890개 31.1조원	918개 70.9조원	1,031개 106.0조원	1,015개 111.2조원
파생상품 (거래대금)	-	-	4,560조원	15,966조원	

○ 게다가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주식회사로서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할뿐더러 경영진 대부분이 낙하산으로 선임됨으로 인해 전문성마저 의심 받고 있음

- 국제경쟁력 제고는커녕 단일 독점거래소로 안주(관료화 등)하여 내부경쟁이 사라지고 지원회사(코스콤, 예탁결제원)마저 비효율을 가중시킴

○ 특히, 코스닥시장의 위축은 신생기업의 꿈과 도전의식을 꺾는 한편, 투자자의 성과공유 기회를 없앰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림

※ 세계최대의 거래소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상해거래소를 국제경쟁력 우위의 시장으로, 심천거래소를 성장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차별육성하고 있는 점과 대조적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30 2015-09-08 오후 1:15:45

□ 정책제언

○ 코스닥시장을 한국거래소로부터 분할하여 기술기업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특화하여 활성화 추진

-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시장, 파생상품시장, 코스닥시장 및 시장의 지원하는 회사(거래소의 자회사)를 사업회사로 두는 지주회사로 전환

<필요 조치사항>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약칭: 자본시장법) 개정

- 자본시장법 제7편(한국거래소)를 개정하여 여러 개의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 거래소 허가기준(최소 자본금 , 임원 등 전문 인력, 전산설비 등 물적인 사항, 대주주 적격성 등)을 정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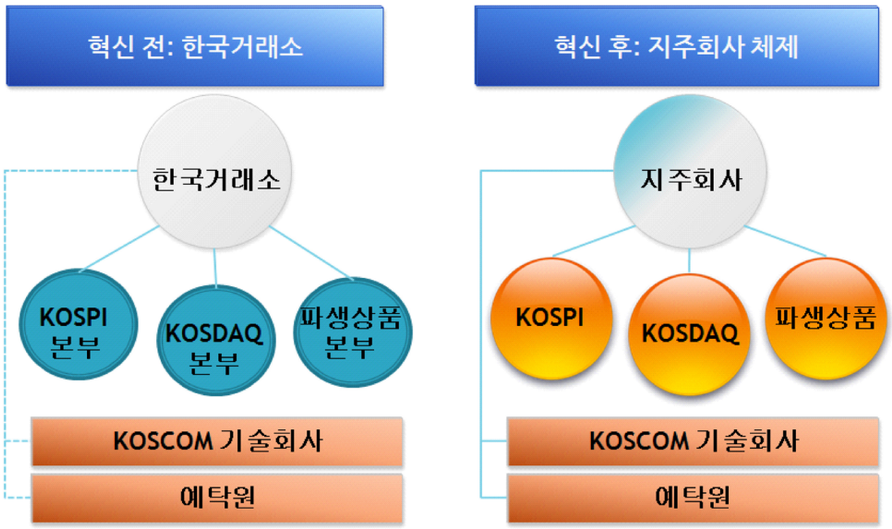
-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본부를 별도의 주식회사로 분할하도록 하고, 정부의 분할 승인(자본시장법 408조) 과정에서 거래소 설립기준에 대한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신설하고자 하는 거래소 설립기준 심사를 마친 것으로 하도록 함

* 현재와 같이 자본시장을 각 지방에 두는 정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분할 신설하는 코스닥거래소는 세종시에 두도록 하여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연구개발형 기업의 창업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도록 유인

* 현재 정부가 입법 발의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한국거래소의 독점을 해제하고 다수의 거래소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31 2015-09-08 오후 1:15:46

<혁신 전후의 모습 비교>



<기대효과>

○ 제조업 중심의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는 한편, 다양한 미래 지향형 기술기업의 도전을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 실업증가, 기업간·산업간·지역간 불균형을 해소 도모

- IT 기술기업의 혁신과 코스닥시장의 붐이 조성되었던 90년대 말 2000년대 초기와 같이 기업가, 투자자에게 코스닥시장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지식기반형 산업 사회를 선도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32 2015-09-08 오후 1:15:51

3) 중간회수와 M&A 활성화

□ 현황과 이슈

○ 창업초기 벤처기업 성장의 핵심 원동력인 엔젤투자의 부재

- 잠재적 비즈니스 엔젤만 1.2만 명으로 추정되나 투자자들이 있어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은 융자(83.3%)나 담보대출에 의존

○ 초기기업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한 중간회수시장의 정체

- 엔젤투자 부진사유는 투자금 회수시장과 기간의 문제로서 현행 투자금 주요 회수시장은 IPO이며, 소요기간도 평균 12년

※ (악순환) 중간회수시장의 부재 → 엔젤투자 위축 → 창업활성화 걸림돌 → 소자본 생계형 창업에 집중 → 생계형 창업간 과잉경쟁 → 신불자, 실업자 양산 → 신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불가 → 사회적 비용을 초래

○ 벤처기업, 벤처투자(엔젤, VC), 대기업 간 불완전한 투자순환 구조

- 미국은 개방형 혁신거래가 가능한 중간회수시장을 통해 투자의 선순환구조 구축

※ (미국)엔젤투자를 통한 기술창업 → 기술개발완료 → 대기업과 M&A(대기업의 시장지배력+벤처의 기술력) → 상호 윈윈(win-win), 투자자는 투자금 회수

미국 벤처생태계의 3大 비밀

1. VC투자규모 수준의 엔젤캐피탈 투자(50%), OECD평균도 약 50%
2. IPO를 통한 투자자금회수(10%)보다 훨씬 큰 M&A위주 중간회수(90%)
3. 벤처기업 → 벤처투자(엔젤, VC) → 대기업 간의 투자 선순환 구조

○ 우리나라는 개방형 혁신거래의 초보적 단계이며, M&A시장도 정체

- 대기업·벤처간 혁신거래가 부진 → 후진형 중간회수 → 엔젤투자 위축
- M&A 부진사유은 높은 무형자산 비중으로 가치평가의 난점, 코스닥 기업은 M&A가 증가추세이나 비상장사는 시장통계 부족하기 때문

※ 벤처기업의 구조는 끝이 뾰족한 첨탑구조 → 피라미드 내지 항아리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 ← 기업간 혁신거래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가 관건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33 2015-09-08 오후 1:15:55

□ 정책제언

○ 엔젤투자 유인 및 개방형 혁신거래의 활성화

- 엔젤투자펀드 확대, 투자자 세제지원(공제율, 이연과제, 종합과세), 투자회수기간 축소 등으로 엔젤투자 매력도 제고

- 대기업은 중소벤처로부터 기술을 공급받고 반대로 자금과 시장을 제공하는 개방형 혁신거래의 활성화로 중간회수의 기반 조성

※ 기존 VC의 초기 기술벤처 투자확대를 위해 세컨더리펀드 확대, 창업기업투자형 VC 모태펀드 우선지원, 우선손실 배제 등을 추진('11말현재, 세컨더리펀드는 13개 펀드에서 6,200억원 운용, 전체조합규모 대비 6.5%로 미약)

○ M&A 중심 개방형 '혁신거래소'의 설립

- 중간회수 활성화를 위해 주식거래시장과는 별도로 기술거래와 M&A 등 Open Innovation을 담당할 '혁신거래소'를 설립이 필요

※ 혁신거래소란 상장기업은 R&D단계에서 신기술을 벤처기업으로부터 수혈받고 벤처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시장을 확보토록 중개하는 기관

※ 미국의 경우 M&A가 중간회수시장의 대세인 이유는 M&A가 일반적으로 기업간 주식교환형태 진행 → 투자후 3~4년 이내에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는 효과

- 대기업은 벤처기업으로부터 기술을 공급받고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자금공급을 받는 개방형 혁신거래의 활성화로 벤처활력 제고

혁신거래소 운영방안

- ○ 기능 : 기술거래 및 기업 M&A중개, 대·중소기업간 혁신거래 촉진 등
- ○ 특징 : 민간주도의 원칙으로 기존의 M&A 관련조직을 흡수통합
- ○ 수익 : 정보수수료, 기술가치평가비, 중개수수료 등
- ○ 방식 : 거래수탁→거래정보분석→Pre-M&A→협상 및 계약→Post-M&A

<혁신거래소의 기대효과>

벤처기업	○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활용, 자금조달, 기술개발에 전력
대기업	○ 효율적 기술개발, 경쟁기술에 능동대처, 시장확장에 주력
벤처생태계	○ 중간회수의 발달로 엔젤 활성화, 투자의 선순환 구조, 창업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발전가능성 확대 → 허리강화
국가경제	○ 고용창출, 사회적 비용 최소화, 국가세수 증대(혁신거래세 신설)
투자자	○ 투자금 조기회수, 재투자 여력 → 투자 매력도 제고
창업자	○ 실패위험 축소, 회수전략 확보 → 고부가가치 창업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34 2015-09-08 오후 1:16:00

5 시장확대

1)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 현황과 이슈

○ 2011 조달청의 내자(물품·용역) 사업실적이 2010년에 비해 3.4% 증가한 17조 9,378억원이며, 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은 13조 9,205억원으로 역대 최고인 77.6%를 기록

-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은 ('07) 66.5%(8조 7,988억원) → ('11) 77.6%(13조 9,205억원) 으로 11.1%p 증가

※ 중소기업청의 중기제품 공공구매도 2012년도 71조원으로 확대

○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제품구매 비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중기제품을 외면하고, 대기업제품이나 외산제품에 의존

※ 2011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실적 : 67.7조원(총구매액이 67.8%)

- 주요이유는 중소기업의 인식부족, 상대적 고가, 제품하자시 책임소재, A/S문제, 품질신뢰도 등

※ 중기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도 10% 이상 구매의무화(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제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등 6종)

○ 공공구매가 부진한 것은 미이행에 대한 페널티와 우수구매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미하기 때문(법조항도 권고사항)

○ 따라서 수요(공공)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시 배점강화, 페널티·인센티브 확대 등 실질적인 이행력 제고대책이 필요

※ 공공구매 이행 실태조사 대상기관은 50개, 실적점검 대상기관은 499개(확대계획)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35 2015-09-08 오후 1:16:03

□ 정책제언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이행력 제고방안 수립**하고, 구매실적에 따른 사후조치 강화

-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중기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평가배점 대폭 상향조정(현행 0.8점)

※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본부)평가항목에도 본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삽입

- 우수 구매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국정감사 3년간 면제, 구매담당 직원·임원 포상 등)

- 실적저조기관에 대한 페널티 강화(해당내용을 일간지에 공고 및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 등 여론촉발형 방법 활용)

※ 공공기관 구매담당의 중기제품 구매로 인한 하자발생시 면책부여, 구매비용 상승에 대한 예산추가배정 등의 조치 필요

○ **'중기제품구매촉진법' 개정으로 강제규정화 및 이행촉진제도 도입**

- 강제규정화에 따른 미이행기관 제재조항을 신설하고, 수의계약 용어 대신 복수의 '기술개발제품간 경쟁구매계약제' 도입

※ 계약물품의 질적제고 및 구매담당자의 수의계약에 따른 감사·특혜시비 차단

○ 공공구매 이행실적 하위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제도 도입**

- 정부의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실적저조기관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중기제품판로지원법 개정)

※ 미국은 Small Business Act에 의거, 상하원의원이 연방감사관에게 조사요구를 규정

○ 중소기업제품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및 자가노력**

- 공공기관의 우수 중소기업제품 구매부진 사유인 품질, 이행능력, 사후관리, 상대적 高價(고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가노력 필요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36 2015-09-08 오후 1:16:04

2)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 현황과 이슈

○ 벤처기업실태조사('11)에 따르면 해외매출비중은 11.2%에 그치며, 해외매출경험 기업수는 37%이나 이중 17.7%만이 자력으로 진출

- 주요사유는 벤처기업 국내매출의 71.5%가 B2B 거래로서 해외진출에 대한 능력이 축적하지 못하였고, 해외진출시에도 시장정보부족, 자금부족, 전문인력 부족 순으로 조사

○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시장개척단 파견, 전시회 참가, 해외마케팅 요원 파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 현지시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출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

※ '11년 전체 IT수출의 중소벤처 비중은 15.3%(1,570억불중 240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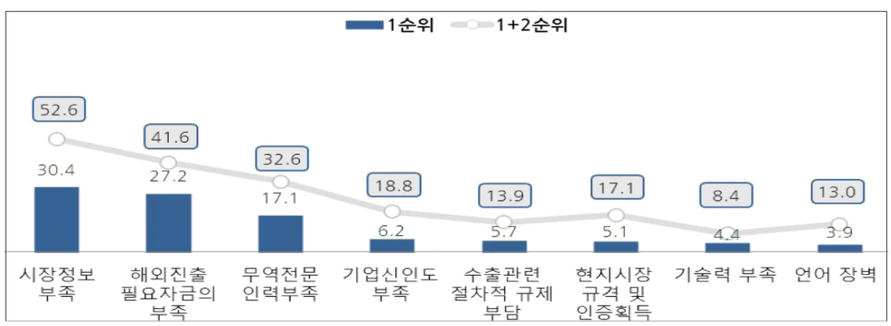
※ '10말까지 해외직접투자 법인수도 전체의 80%이나 투자금액으로는 10%수준

- 특히, 해외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나 중소벤처기업은 여건상 이를 갖추는데 한계

※ 수출증대 지원방식(Going Global)에서 글로벌 성과 창출방식(Growing Global)으로의 전환이 필요

○ 이러한 문제로 한국에서는 글로벌스타기업가(예:마크 주커버그)를 배출하지 못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 벤처기업 해외진출 애로사항 >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37 2015-09-08 오후 1:16:09

□ 정책제언

○ **"중소벤처전문 글로벌상사" 설립**

- 창의적 세계상품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정보제공·거래중개를 위한 상사를 설립하고, INKE(한민족글로벌네트워크)와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

※ B2B벤처는 선진국, B2C는 신흥시장 위주로 전략국가에 벤처기업 공동이용 해외거점사무소 설치, 온라인 현지시장설명회, "선도기업-신생기업 생태계형 공동해외진출사업" 등 추진

(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걸림돌 1위는 시장정보 부족(商議, 2012)

○ **글로벌 자회사 설립 및 운영** 지원

- 수출을 통한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벤처를 대상으로 중장기 글로벌 자회사 설립 및 운영을 지원(전문가 컨설팅 필수)

- 본사와 자회사 혹은 국외 자회사 간 회계, 통신, ERP, CRM 등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업그레이드 관련 비용 지원

○ **'글로벌혁신 벤처기업' 선정** 및 지원

- 기술력 우수 벤처기업 대상 가운데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을 선정

※ (선정기준) 글로벌 혁신능력, 글로벌 사업화능력, 글로벌 경영능력, 글로벌 혁신성과 등

- ICT·Green·바이오 등 주요 업종에 시범적으로 운영(2013년도)하되, 글로벌 브랜드 육성, 규격인증 획득, 공공입찰, 시장조사, 해외인턴인력 등의 사업을 집중지원

○ 우수 **조달제품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 일정기간 국내조달시장에서 호평받은 제품을 대상, INKE, KOTRA 등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개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

※ INKE 등이 현지공공조달 정보수집 및 DB화, 입찰멘토 발굴 및 연계, 지역별 계약문화 교육 등 수행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38 2015-09-08 오후 1:16:11

Ⅳ 기대효과

□ 지식기반경제 시대, GDP 5만불 조기달성을 견인

○ 한국경제가 2만불 Trap을 극복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전과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선진국형 강소기업인 벤처가 해답

○ 즉, 현재까지는 경제의 효율성·제조업 중심·수직적 기업구조·원가중심 → 선진국은 수평공생적 생태계·가치(창조)중심 전략이 필요

※ 주력산업 **대기업**과 기술첨병 **벤처**는 경제고도화를 위한 **수레의 양바퀴**

□ 창업 붐 조성과 일자리 창출 주도

○ 2030세대의 기술창업은 촉진하고 고급기술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미래 경제주체들의 열정과 기업의욕을 촉발

※ 사업기회 포착능력과 기술변화 대응력이 뛰어난 청년층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장되지 않는 선순환 생태계

□ 창조적 세계명품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에 앞장

○ 벤처에 투자해야 조직특유의 유연성과 민첩성으로 기술개발을 주도, 세계시장에 내놓을 창조적 명품을 개발

※ 대기업은 산업화 이후 아이폰·닌텐도 같은 세계명품을 탄생시키지 못함 (그러나 토종벤처는 **MP3** 기술로 워크맨을 제압)

□ 기술중심 금융시스템의 발전 촉진

○ 벤처는 기존 제조업과 달리 기술 및 아이디어가 경쟁력의 원천이므로 물적 담보가 아닌 기업의 미래가치에 투자를 유도, 선진국과 격차를 두고 있는 우리의 금융시스템 발전에 기여

※ 보증기관, 기술금융기관, 벤처캐피탈 등의 기술평가 투자(보증) 촉진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39 2015-09-08 오후 1:16:14

[자료집7] 벤처기업 육성방안 내지(양면).indd 40 2015-09-08 오후 1:16:14